

# 대법원 2018도11455

## 이군현 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조재연)은 2018. 12. 27. 이군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, '보좌직원으로부터 월급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'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8도11455 판결)

### 1. 사안의 내용

#### ▣ 공소사실의 요지

- 피고인은 제17, 18,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,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통영·고성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음
- 피고인은 2011. 7.경부터 2015. 12.경까지 비서 겸 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,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좌직원 3명으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합계 246,373,28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음
- 피고인은 2011. 5.경 ○○상업고등학교 동문과 골프모임을 하면서 동문들이 모금한 현금 1,5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음

#### ▣ 원심(= 1심)의 판단 ☞ 유죄

- 피고인이 보좌직원으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인정함
- 피고인이 비서 겸 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

정치자금을 수입·지출하였고,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음

- 피고인이 ○○상업고등학교 동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,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음

## 2. 대법원의 판단

- ▣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

## 3. 판결의 의의

- ▣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, 집행유예 3년, 사회봉사 200시간, 추징 261,373,280원(정치자금 불법수수 부분) 및 징역 6개월, 집행유예 3년(그 외 부분)을 선고받았음
- ▣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직에서 당연 퇴직하고,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됨